

도, 가뭄대비 합동 총력대응

시군·농어촌공사 등과 대책회의 열어 30일부터 상황실 설치·운영 선제대응

전북도가 논과 밭작물에서 가뭄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은 5억900만톤으로 평년대비 98.6%로 모내기철 용수공급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이 1539mm로 평년대비 57%수준의 적은 양으로 산지·구릉지 및 용수로 말단부 등 용수공급이 어려운 곳에서 가뭄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26일 전북도청에서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가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가뭄피해 현황 긴급 용수공급 추진대책을 점검하고,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향후 예상되는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선제적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올해 가뭄 우려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가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 50억원(국비 6, 도비 5, 시군비 39)을 투입해 추진 중인 관정개발, 양수장 설치 등 사전 용수

원을 개발하는 선제적 가뭄대책사업을 점검했다.
이와관련 남원, 순창 고창 등 일부 시·군에서는 예비비 자체 유지관리 예산을 활용해 가뭄피해가 우려되는 들녘 말단부 천수담 및 생육 지역이 우려되는 밭에 관정개발, 하상굴착, 하천 물막이, 양수장비 지원 등 긴급 용수공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 가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추진 중인 가뭄대책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고,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농업용수 부족으로 가뭄피해 발생이 우려가 있는 도내 농경지 330ha(논 113, 밭 217)에 대한 관정개발, 양수장 설치 등 신속한 용수공급 대책을 국가차원에서 추진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국비 13억 원)에 건의할 계획이다.
유호연 도 농업정책과장은 "가뭄, 태풍 등 자연재난은 인력으로 사전에 막을 수 없지만, 사전 대책마련 및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시군 및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있는 물고 관리, 농경지 퇴수 제어용 등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6일 도청에서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가뭄피해 현황, 긴급 용수공급 추진대책을 점검하고,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향후 예상되는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선제적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가졌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현장 찾아가 26일 군산시 신관동에 위치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현장을 찾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공사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현 정부 세수추계 실패·오차 진상 규명”

민주 김수홍 의원, “세수추계 진상규명 TF 발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이 26일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의 과도한 초과세수의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을 위한 TF'(이하 '세수추계 진상규명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세수추계 진상규명 TF는 유동수, 신정훈, 김수홍, 강득구, 양영숙 의원으로 구성되며, 김수홍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61.3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오차에 연이어



을 예상하지 못한 셈이다. 김수홍 의원은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해 조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과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세수 오차에 대해 재정 운용의 무능력, 재정의 전략적 이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족한 세수추계 진상규명 TF는 원인과 책임 규명, 제도개선 마련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해당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수홍 의원은 “국가재정은 국가업무의 시작이며, 국가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11대 도의회 성공적인 마무리 최선”

후반기 신임 의장에 최찬욱 도의원 선출 부의장에 오평근 도의원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최찬욱 의원이, 부의장에 오평근 의원이 선출됐다.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최찬욱 의원이 선출됐다.
도의회는 26일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6·1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의장과 부의장 보궐선거를 통해 의장에 최찬욱 의원(전주10), 부의장에 오평근 의원(전주2)을 각각 선출했다.
최 의장은 “제11대 도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그간 우여곡절의 파고를 지나온 도의회의 위상을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 “남은 기간 11대 도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제12대 도의회의 차질 없는 개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의회 6선과 시의장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윤리위원

위원장 경험과 역량을 살려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제11대 도의회의 마지막이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평근 부의장은 “제11대 도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장단의

직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원들의 빛나는 의정 활동이 민의의 전달에 자랑스럽게 기록되고, 12대 도의회가 도민들의 신뢰 속에 개원할 수 있도록 민정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불공정 부연설명으로 만든 여론조사, 공표폐선 안돼”

김윤태 교육감 후보 선대위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사진)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26일 오후 5시 도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감 여론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선대위는 후보보다 부연설명과 서열관념으로 만드는 여론조사 결과, 조사기관이 일정한 기준없이 임의대로 적용하는 부연설명은 여론 조사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란식의 여론조사는 민심을 왜곡시키고, 교육감 선거를 혼란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 선대위는 ‘허제 지지자로부터 입소스’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면접으로 전북 도지사와 교육감 지지도 여론조사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전북 도지사 후보 조씨는 정당과 기호, 후보자의 이름을 질문하지 만, 정당과 기호가 없는 교육감 후보 조씨는 후보자의 이름 뒤에 대표경력 을 설명해 조사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
이들은 “이런 대표경력 부연설명은 일면 맞는 것 같지만 매우 심각한 문



제를 안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론조사는 유권자에게 ‘전북대, 전주교대, 우석대’라는 학교가 가진 선입견을 주는 서열의 선입견도 주는 이중 선입견을 준다”고 밝혔다.
특히나 ‘깜짝이 선거’라는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선입견을 주며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고 했다.
김윤태 후보 선대위는 “이런 조사는 분명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다”며 “선관위는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 을 사용했으니 무방하다지만 형식 논리에 치우친 전북선관위의 낮은 공정 의식도 개탄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그들은 “이런 여론조사로 이제 까지 교육감 선거의 민심을 왜곡해 온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란식의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공표 금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문성 기자

“친환경선박 연료 개발 플랫폼 구축”

민주 신영대 의원 “군산 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기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26일 “군산시가 산업부의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플랫폼 구축사업은 대기 및 해양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 대신 LPG 바이오기질, 암모니아, 하이브리드와 같은 저·무탄소 대체연료를 사용한 추진시스템의 핵심 성능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에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선박 개발 및 보급의 15%인 5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저탄소 대체연료 운영 선박에 관한 연구가 초기 단계에 그쳐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군산시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군산시는 공모 선정으로 2026년 12월까지 약 5년간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성능 검증을 위해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비 100억 원 을 지원받는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70억원 규모로 나머지 비용은 도비와 시비를 충당해 사업을 진행한다.
신 의원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로 관련 기업 지원과 유치를 통해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 하는 등 군산 조선산업 육성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라며 “더불어 친환경 선박 기술을 활용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과 내년 현대중공업 재가동과 맞물려 군산을 서해안 조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호성 기자

“수도작 농작업비 185억원 중 50% 지원할 것”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 “가구당 67만원 이상 소득 보전 효과”

무소속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는 26일 “수도작 농작업비 185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93억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체 가구당 67만원 상당의 농가소득 지원효과가 발생해 농산물 적정가 보장을 더하면 100만 원 이상 지원효과 발생된다”고 말했다.
최영일 후보 측에 따르면 순창군의 인구는 2019년 기준 2만1,777명에 평균 가구원 수는 2.1명이다.
수도작 면적은 7,188만3,690㎡이고, 농촌부터 수확, 비 밀집까지 소요되는 농작업 비용은 평방미터당 250원이다.
200평 기준 마지기 당 17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순창군의 수도작 농작업 비용은 총 185억원 상당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순창군 비 생산을 살펴보면, 마지기



당 40KG 기준 평균 10가마가 생산된다. 2020년 2등급 수매기준 40KG 한 가마에 7만1,800원 임을 감안할 때 마지기당 71만8,000원의 조수익이 발생된다.
10 마지기 미만의 소농의 경우, 연간 조수익이 700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여기에 농작업비 170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 나면, 530만 원에 불과하고, 농약제와 모판 구입비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농촌의 극빈자인 셈이다.
이에 최영일 후보는 “총 농작업 비용 185억 원중 50%인 93억 원 상당을 지원해 소규모 농가의 소득을 보전, 최소한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제가 당선돼 이 공약이 실현되는 경우 주민 80% 상당이 혜택이 아닌 세금을 내는 농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유호성 기자

“북면 SK넥셀리스 인근에 배터리 부품공장 유치”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가 “SK그룹이 반도체(Chip)·배터리(Battery)·바이오(Bio) 등 이른바 BBC 산업에 향후 5년 간 247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 발표와 관련해 북면에 위치한 SK넥셀리스 정읍공장 인근에 배터리 등 관련 부품공장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은 26일 “이 가운데 142조원을 국내에 투입한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5만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음=김대환기자



“수소와 태양광 발전 등 그린에너지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관련 기업들의 창업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